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과제 대토론회



- ◎ 일 시 : 2011년 8월 25일 (10:30 ~ 12:00)
-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 주 최 :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 ◎ 주 관 : 대전발전연구원
- ◎ 후 원 : CMB 대전방송

## □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30~10:31	1분	국 민 의 례	
10:31~10:32	1분	개 회 사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10:32~10:35	3분	축 사 1	심 대 평 (국민중심연합대표)
10:35~10:38	3분	축 사 2	염 홍 철 (대전광역시장)
10:38~10:40	2분	축 사 3	이 상 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10:40~11:00	20분	주 제 발 표	강 영 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1:00~11:30	30분	토 론	김 선 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
			손 병 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이 광 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
			양 승 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
			박 희 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정 여 운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11:30~12:00	30분	자 유 토 론	
12:00~12:01	1분	폐회 및 기념촬영	



# 개 회 사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

개회인사에 앞서, 먼저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사수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뚝뚝 뚫어주신 500만 충청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로 발표된 직후 매우 민첩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전시가 중심이 되어 충남도, 충북도가 참여하는 과학벨트 TF팀도 구성했고, 최근 대전의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과학벨트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창구와 컨트롤 타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차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을 대하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또한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캠퍼스 도입 문제도 확실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캠퍼스를 변칙적으로 도입하여 분산배치하는 것이 과연 과학벨트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또 과학정책의 기본인 선택과 집중논리에 적합한 결정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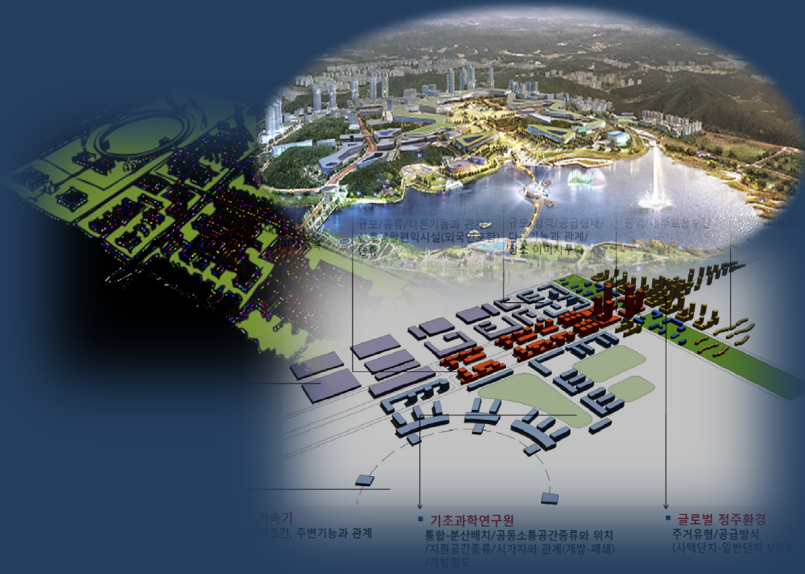
연말이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지혜들이 기본계획 수립에 잘 반영되어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강영주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의 해안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사수했던 그 열정과 관심,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도 과학벨트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과학벨트가 건설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 조성에 따른 대전시 대응 과제

2011. 8.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주

## 차 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지자체 대응 과제

I. 과학벨트 조성목적과 개요

II. 과학벨트의 기대효과

III.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관계

IV.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지자체 대응과제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중심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 조성목적과 개요

조성목적

사업개요

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

01

**조성목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과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연구리더를 육성**
- ➔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거점**과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사업개요**

- ➔ **[사업비/사업기간] 5조2천억원 / 2011~2017**
- ⊙ 2012년 가속기설계와 연구단(25개 내외) 지원 등 **기초연구비(s/w) 4,100억원 투입**

< 소요자원 (2011 ~ 2017)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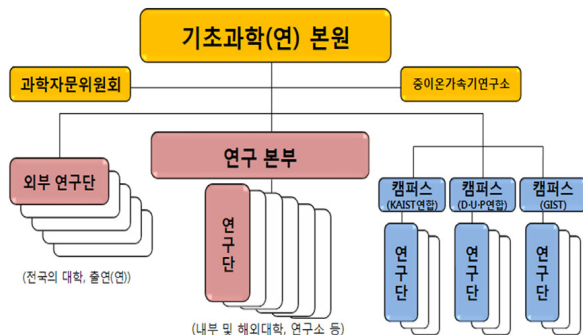
구 분	'11	'12	'13	'14~'17	총계
계	100	4,100	7,900	39,700	51,800
기초연구 지원 (연구단, 대형시설·장비, 해외기관 유치 등)	56	3,200	4,200	28,000	35,456
연구기반 조성 (본원·캠퍼스 건설, 정주여건 조성 등)	-	400	2,300	6,000	8,700
중이온가속기 구축	44	460	1,000	3,100	4,60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및 공동 R&D 등)	-	40	400	2,600	3,040

**기초과학연구원**

- ➔ **[기초과학(연)의 사업 ]특별법 15**
- ⊙ 기초과학연구 / 기초연구
- ⊙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 ⊙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 융합에 관한 연구
- ⊙ 기초연구시설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
- ⊙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설립운영]**

- ⊙ 국내외 석학급 2500여 과학자 참여
- ⊙ Site-Lab을 중심으로 Network을 구성하는 개방형 조직(외국인 과학자 비중 30%)
- ⊙ 연구단장이 인력구성, 연구비 배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율형 조직
- ⊙ 연구자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첨단 장비, 고급 테크니션 지원, 행정업무 간소화 실시
- ⊙ 조직은 본원과 캠퍼스, 외부 연구단으로 구성(본원은 연구원 운영을 총괄)



기초과학연구원

▶ [캠퍼스] 3개 캠퍼스(KAIST연합, D·U·P연합, GIST)

- ⊙ KAIST연합은 KAIST와 대덕의 출연(연)
- ⊙ D·U·P연합은 3개 과학기술 특화대학(DGIST(대구), UNIST(울산), POSTECH(포항))이 연합·운영
- ⊙ 외부 연구단은 전국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집단을 선정·지원

▶ [충청권 사업별 투자규모] 2조3천억원 / 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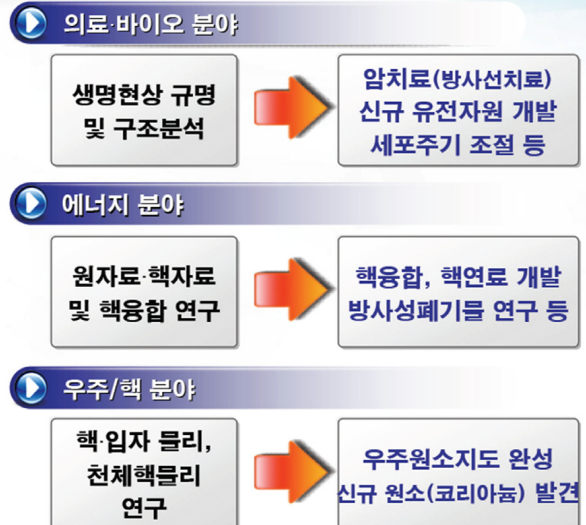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대전·청원·천안·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구 지원 (연구단: 본부 15 내외, KAIST연합캠퍼스 10 내외)</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반 조성 (본원 및 캠퍼스 건설, 정주여건 조성 등)</li> </ul>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이온가속기 구축</li> </ul>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및 공동 R&amp;D 등)</li> </ul>	0.3

가속기

▶ [필요성 및 목적]

- ⊙ 노벨상 수상 연구의 81%, 진보적 연구결과의 63%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통해 도출(NSF, 1997)
- ⊙ 세계최고수준의 대형기초과학연구시설 및 핵심연구장비의 전략적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 기초과학과 융합기술 선도(건설비 약 4,600억원)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 가속기 구축
- ⊙ 가속기는 총 12개국 20여기 가동·건설 {미국(3), 일본(3), 독일(3), 프랑스(2), 캐나다(2), 중국(2)}

▶ [가속기 활용분야]



가속기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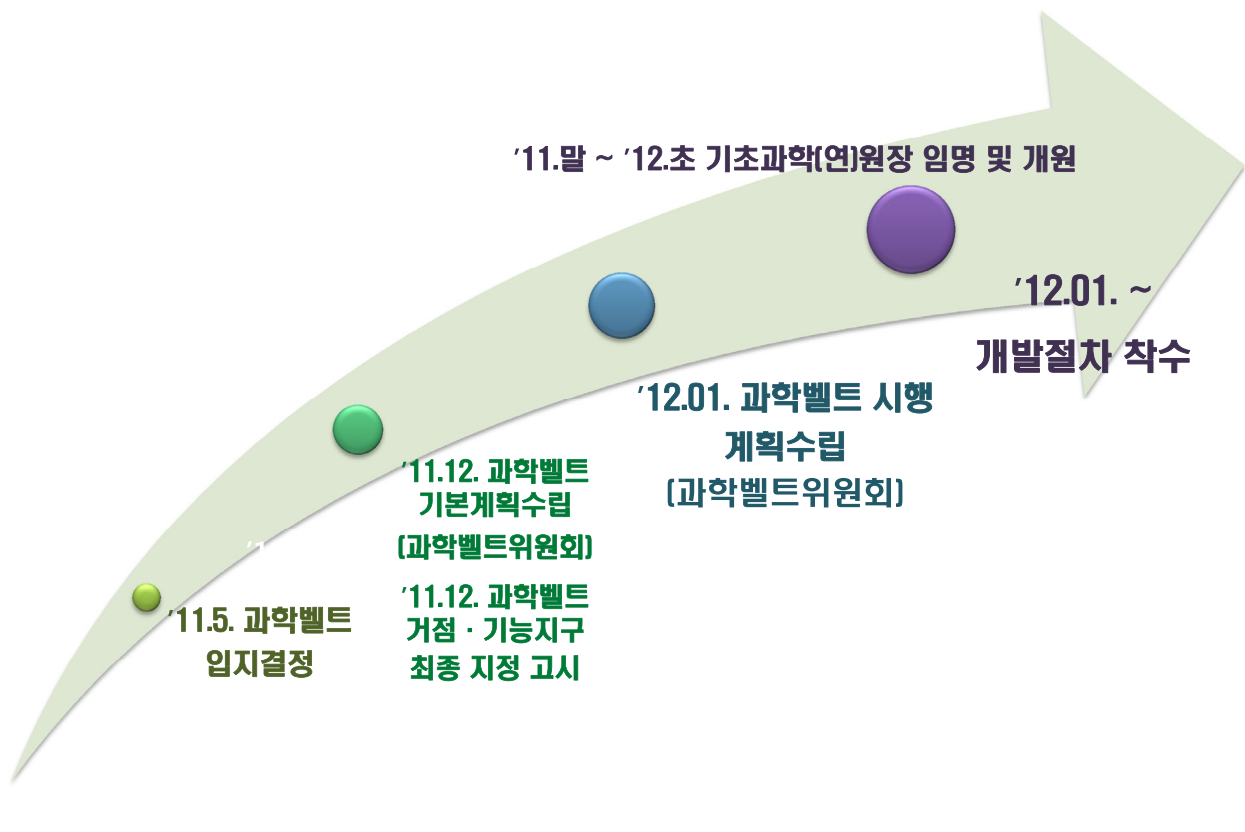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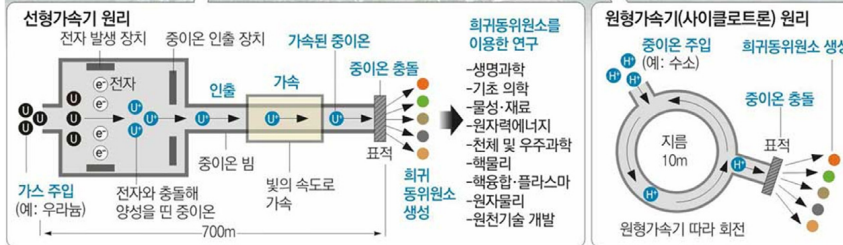


선형가속기 추후 확장 예정

- 1 원형가속기(지하)
- 2 선형가속기(지하)
- 3 중앙제어동
- 4 초전도시험동
- 5 고주파시험동
- 6 유틸리티동
- 7 공작동
- 8 타깃동(지하)
- 9 저에너지실험동
- 10 고에너지실험동
- 11 원자트랩실험동
- 12 핵자료 실험동
- 13 의학 실험동
- 14 기초연구동
- 15 응용연구동
- 16 중합연구동
- 17 본관동

[가속기 사양]

- ① 제원 : 에너지 200 MeV/u (최대 500 MeV/u)
- ② 빔전류 : 8pA로 선형가속기 길이 700m
- ③ 이용자 수요 : 국내는 핵물리·원자력 및 관련분야 연구자 등 250명 수준으로, 가속기구축 시 증가가 예상됨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중심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의 기대효과

정성적 효과

정량적 효과

02

정성적 효과

- ▶ 아시아를 선도하는 미래 융합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 ⊙ 연계 연구 활성화를 통한 신 융합산업 창출 : 기초(연)을 통해 많은 인력과 거대장비가 필요한 융·복합 기초과학연구가 수행됨으로써 미래 대형 융합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토대 마련
  - ⊙ 대덕 R&D 특구의 기술 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한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
  
- ▶ 협업연구체제 구축을 통한 세계적 과학기술위상의 재정립
  - ⊙ 기초연 - 특구출연연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내 최초 노벨상 수상자 배출**
  - ⊙ 가속기 실험 데이터의 e-science 사용 환경 구축 : IT-BT-NT 기술 융합 및 국제공동협업연구 가능
  
- ▶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 내 기업의 전문인력 활용 용이성 증대, 정주환경 개선 효과
  - ⊙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학벨트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 ⊙ 과학벨트의 기초과학연구 기능과 대덕 특구 내 응용·융합기술관련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 간 기능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정량적 효과

- ▶ 국민경제 : 20년간('10~'29) 212만2천명 (연평균 10만6천명)
- ▶ 지역경제 : 20년간('10~'29) 136만1천명 (연평균 6만8천명)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국민경제 20년간('10~'29)	235조 9천억원 연평균 11조 8천억원	101조 8천억원 연평균 5조 1천억원	212만 2천명 연평균 10만 6천명
지역경제 20년간('10~'29)	212조 7천억원 연평균 10조 6천억원	81조 2천억원 연평균 4조 1천억원	136만 1천명 연평균 6만 8천명

☞ '0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 인용(3조 5천억원 투입시 파급효과)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중심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 지구의 관계

특별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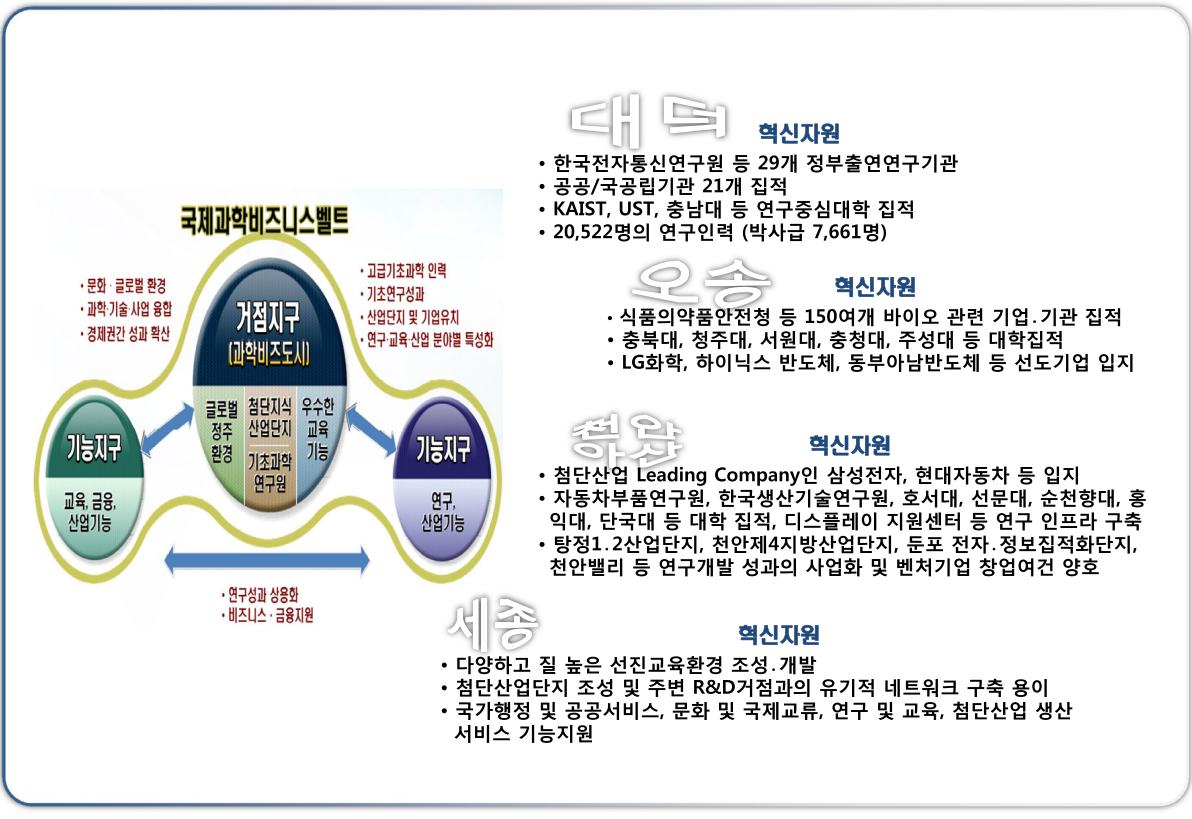
지구별 기능 및 역할 도출

지구별 역할 및 기능

03

거점지구	지구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대형기초연구시설설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산업시설용지 조성 지원 및 국내외 연구기관/기업 유치 지원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근무 외국인에 대한 사중 발급의 절차간소화 및 체류기간 연장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문서 외국어 발간·접수·처리서비스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인 주택 공급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가능	대학에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사업 지원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 우선 설치 또는 유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지원 -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 연구인력·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출연

자료 : 법제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거점지구

대전 유성구 신동지구 + 둔곡지구

- ◎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고, 국제 기능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자원 유입 촉발

▶ 기능지구 : 청원(오송·오창) · 연기(세종시) · 천안

→ 산업, 금융, 교육, 연구 기능 지구지정

- ◎ 거점지구의 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 순환구조를 완성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중심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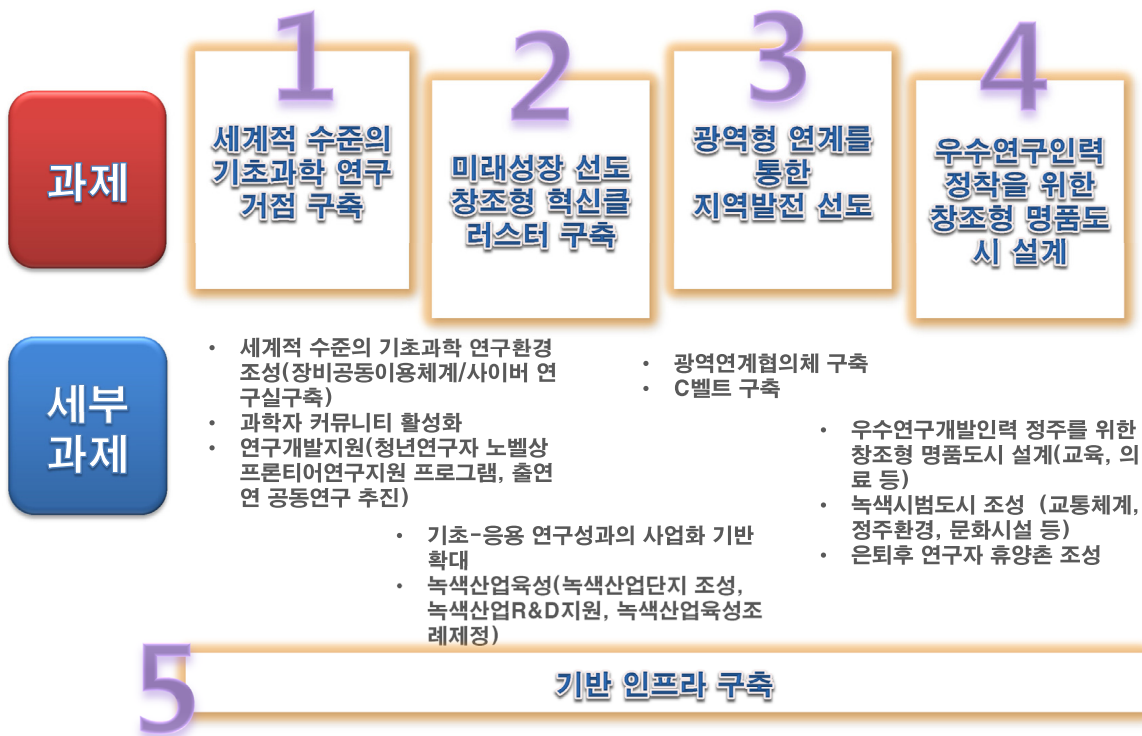
##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지자체 대응과제

과제 도출

세부 과제

과제 1~5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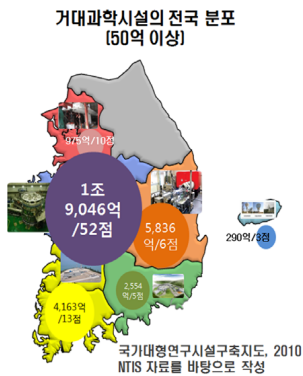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 대규모 연구장비 공동이용체계 구축

- ⊙ 52점의 대형 연구장비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장비 공동이용체계 구축



➔ Cyber-Lab 구축

- ⊙ KISTI의 슈퍼컴퓨터센터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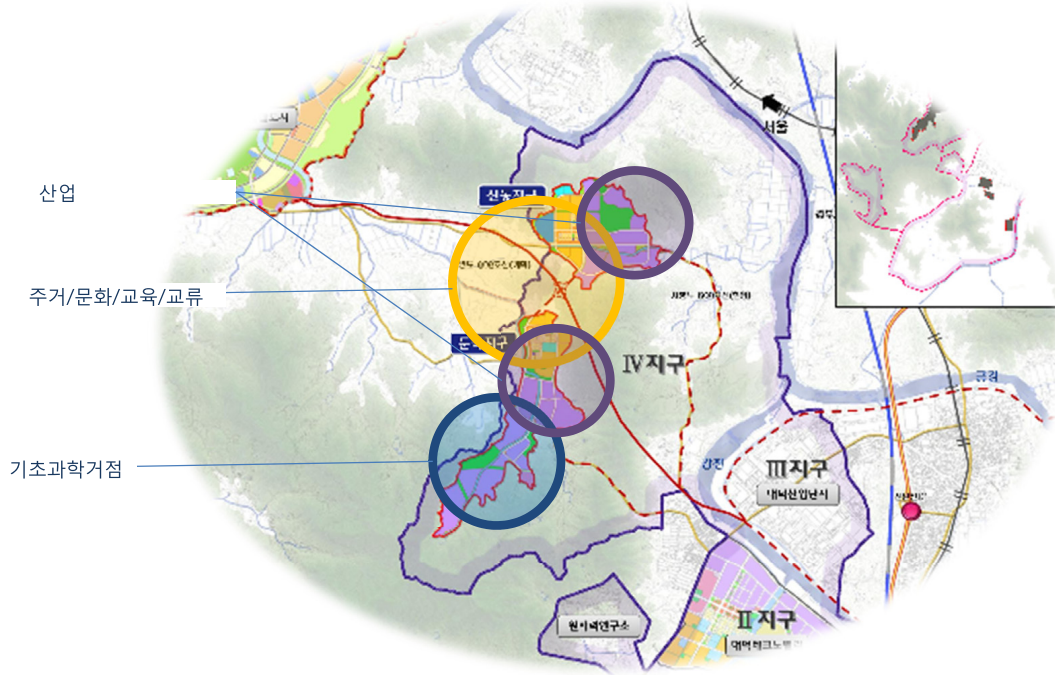


2. 연구개발지원

- ➔ 출연연 공동연구 지원
- ➔ 청년연구자 노벨프론티어 연구지원 사업
- ➔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지원
- ➔ 우수인재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 아시안 우수인재 펀드 조성
  - ⊙ 아시아태평양교육과학기구(APES)창설
  - ⊙ 세계과학도시Club

3. 효율적인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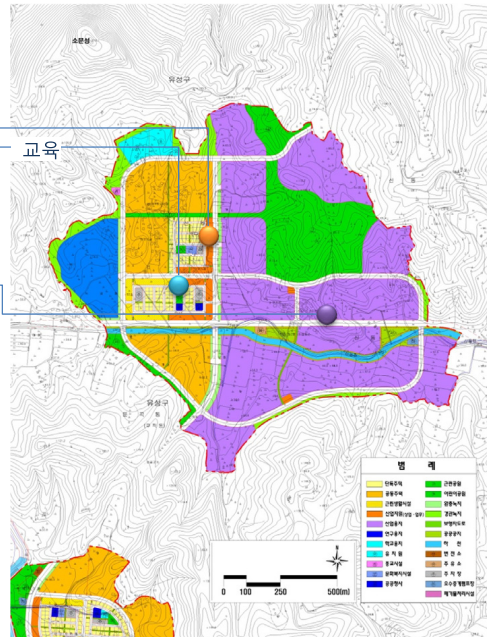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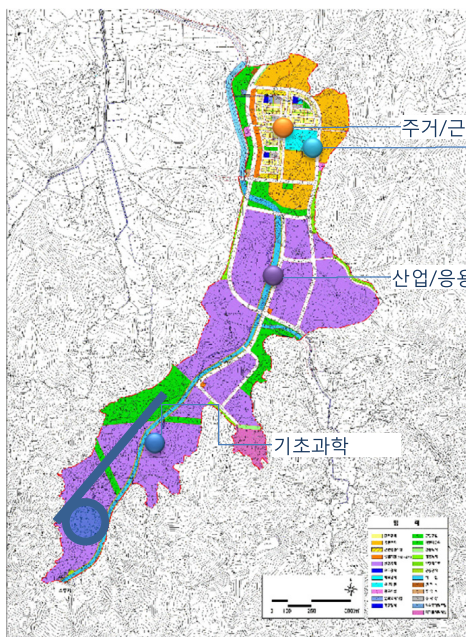
둔곡/신동 지구 토지이용 계획(특구2단계)



3. 효율적인 배치계획

둔곡지구 토지이용 계획(특구2단계)

신동지구 토지이용 계획(특구2단계)



기초-응용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반 확대

- ➔ 사업화 기능 강화
-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 아시아기술혁신협력재단 설립
- ➔ 첨단 융복합 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 ➔ 아시아 기술인증평가센터 유치
- ➔ 기초과학 연구성과 사업화 기관 유치
  - ⊙ 사업화 기관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 ⊙ 부지, 연구개발비, 부대시설, 인프라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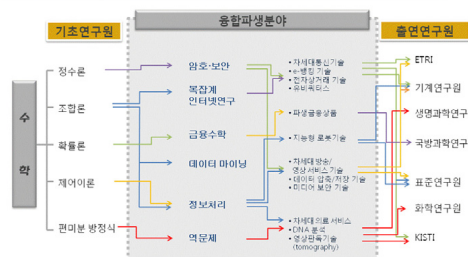
기업 지원

- ➔ 미래신성장 첨단융복합산업단지 조성
- ➔ 산업R&D 지원
- ➔ 녹색산업 및 첨단융복합산업 육성조례제정
- ➔ 바이오-나노소재, 나노-IT융합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 ➔ 녹색기술테스트베드 구축
- ➔ 유치기업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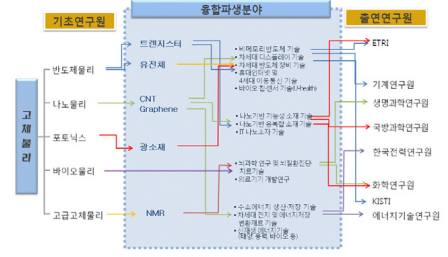
기초연 연관산업 육성

➔ 분야별 핵심산업 유치 및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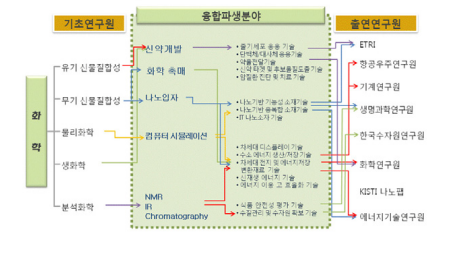
기초연(BSI)과 줄연연 연계를 통한 융합파생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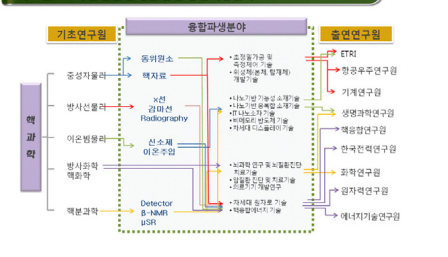
기초연(BSI)과 줄연연 연계를 통한 융합파생분야



기초연(BSI)과 줄연연 연계를 통한 융합파생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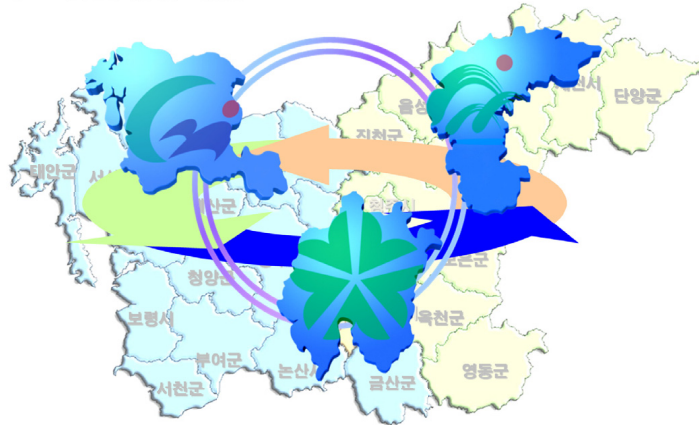
기초연(BSI)과 줄연연 연계를 통한 융합파생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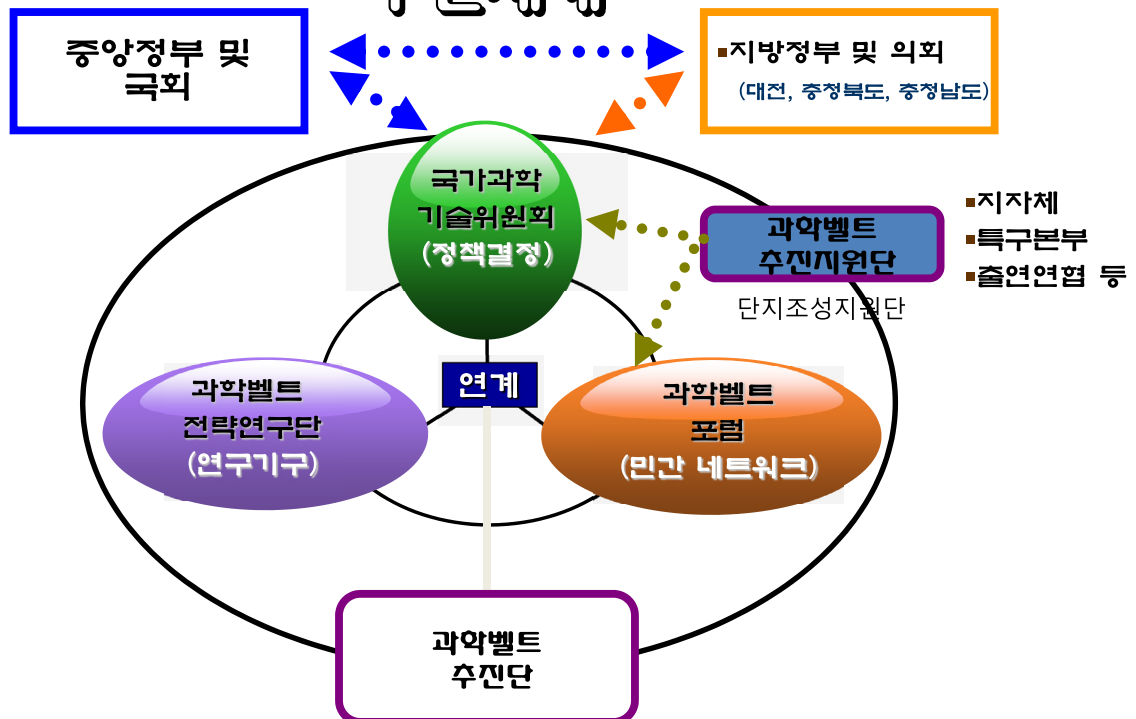


광역 연계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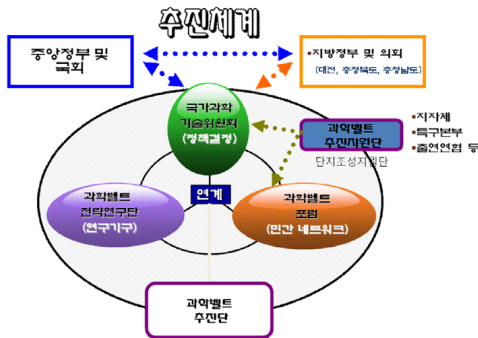
- ▶ 충청권 범시도민 과학벨트 지원협의체 설립
- ▶ 과학벨트 경제발전 포럼 설립
- ▶ 기초과학커뮤니티센터 공동 설치
- ▶ 인큐베이션센터 입주 업체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지원
- ▶ 과학벨트 진흥 기금 마련
-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 공동 대응



추진체계



# 기구별 역할 및 기능



## 과학벨트추진지원단

- 지자체, 특구본부, 출연연협의회 등으로 구성
-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지원
- 입주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조기가동 지원
- 부지공급과 등기 등 각종 행정 업무 지원
- 건축 관련 인허가와 준공 등 업무 대행
-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 입주기관간 상호교류의 장 제공

##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 기본계획, 부처별 시행계획, 벨트 대상 지역, 민자 유치계획 등 심의 의결

## 과학벨트포럼

- 민간 차원의 과학벨트 발전 방안 모색

## 과학벨트추진단

- 기존 과학벨트추진단+관련지자체, 민간전문가
- 전반적 사업 총괄

## 과학기술전략연구단

-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수립 지원

## 거점-기능지구 연계활성화

- ➔ 공동 기업지원체계 구축
- ➔ 기업지원기관의 공동 이용체계 구축
- ➔ 기능지구간 3개시도 연계 교통망 확충
- ➔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 ➔ Site-Lab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 ➔ 기능지구간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
  - ⊙ 사이버 영상회의의 시스템 구축
  - ⊙ 연구정보DB관리시스템 구축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시민친화성과 행정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

미래성장 동력 개발 및 육성

첨단복합의료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생명공학 중심지 조성

세종시의 6개 기능지구 중 첨단지식기반지구는 360만㎡(주거용지280만㎡ 포함)

최고의 대학(원)과 연구기관 입주

도시기능의 원활한 작동 지원

문화·업무·상업·국제교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

세종시와의 연계발전



1-2, 1-4 주거 및 교육지구  
2-3 첫마을 조성 공사(주택 7천호)  
1-5 중앙행정기관

주거와 행정은 조성 중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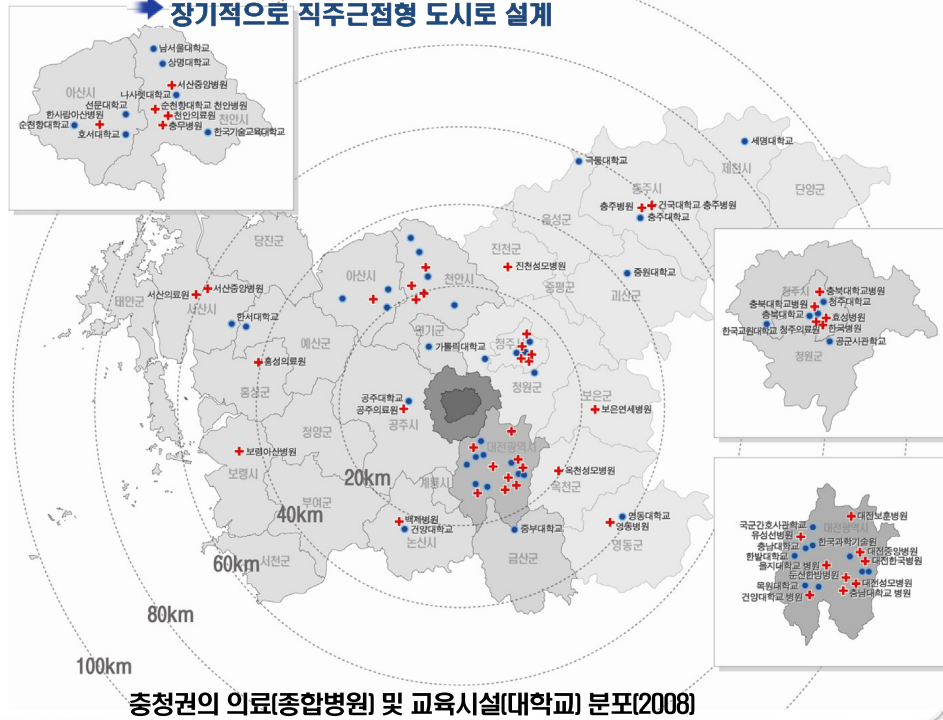
5-2, 5-3 의료복지,  
6-1, 6-2, 첨단지식기반 산업  
4-1 대학 연구  
등은 ?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의료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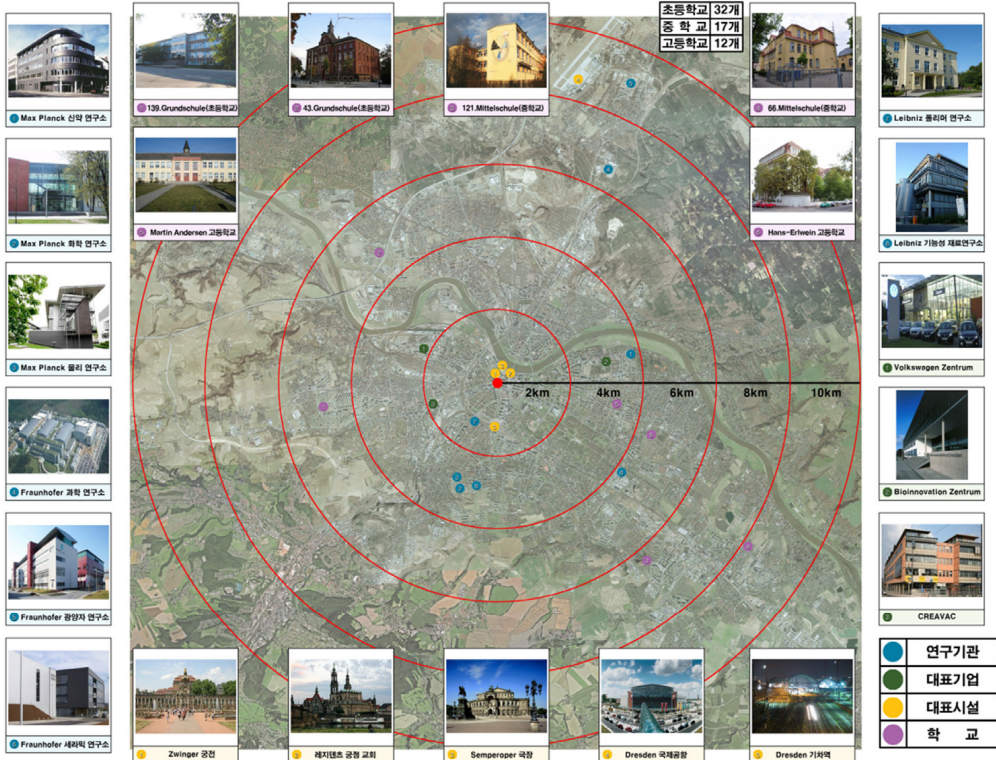
- ➔ 교육기반
- ➔ 의료기반
- ➔ 문화기반

주변지역 교육시설 부족  
장기적으로 직주근접형 도시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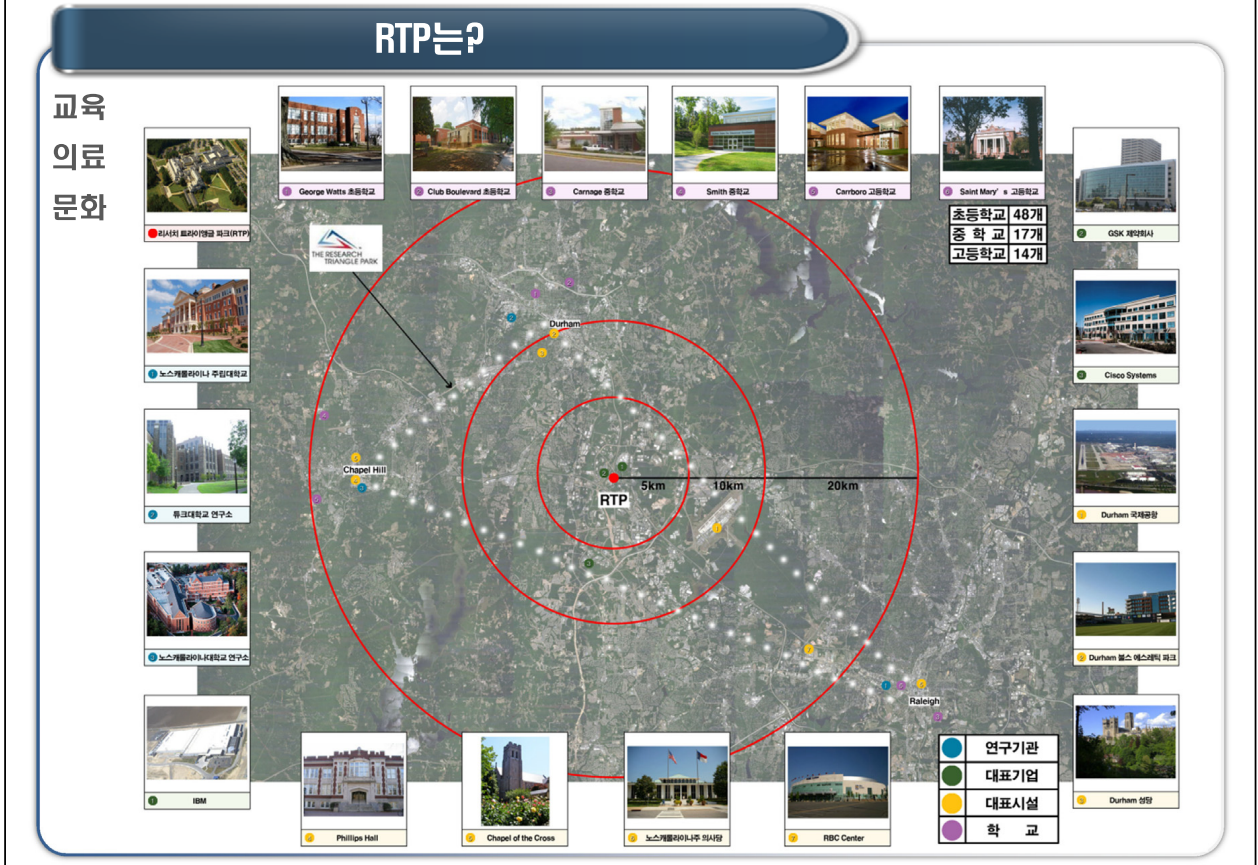


드레스덴은?

교육  
의료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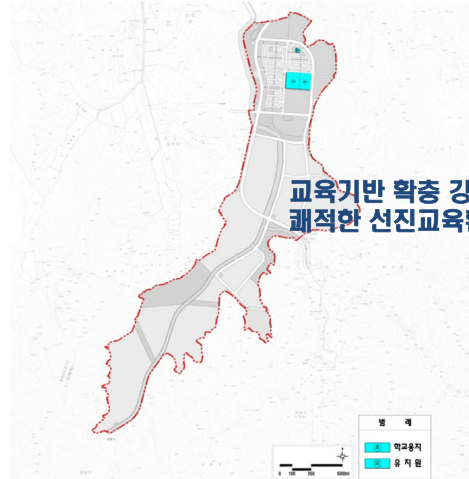




###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의료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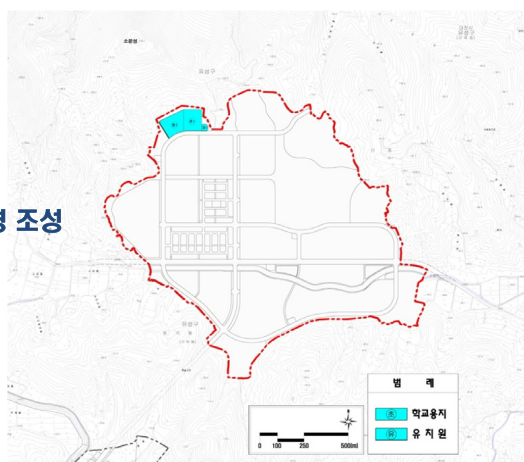
#### ▶ 교육기반

##### 둔곡지구 교육시설 설치 계획(특구2단계)



시설명	위치	면적 (㎡)
계	-	27,298
유치원	둔곡동 32-7답	1,108
초등학교	둔곡동 23-1임	12,114
고등학교	둔곡동 산18-1임	14,076

##### 신동지구 교육시설 설치 계획(특구2단계)



시설명	위치	면적 (㎡)
계	-	27,210
유치원	신동 산77-3임	1,233
초등학교	신동 180답	12,572
중학교	신동 184답	13,405

**교육기반 확충**

- ➔ 외고, 과학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추가 설립
- ➔ 쾌적한 선진 교육환경 조성(학급당 학생수 20인)
  - U-school 학습정보체제 구축·운영 및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커리큘럼 도입
  - 지역의 사회·문화·복지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
  -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및 풍부한 교육·생활여건 강화

**우수대학 유치 지원**

- ➔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공급 지원
- ➔ 충청지역 대학의 학제간 공동교육,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캠퍼스 설치 또는 산학협력단지 조성
- ➔ 신성장 동력 분야 대학원과 연구기능 확장 [신 성장 동력분야 교수·학생증원 허용]

항목	지원내용
부지공급	개발지 100만원 /3.3㎡
재정지원	특별회계, 대학지원예산 또는 금융지원

**의료·복지 기반 강화 지원**

- ➔ 도시·지역·기초 생활권 단위별 통합 공공 의료복지시설 건설
  - ⊕ 유아·여성·청소년·노인 및 장애인 등 특화의료복지시설 건립
- ➔ 우수 병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세종시 의료 기반 확충시까지 대응 필요**

**세종시 의료복지시설 도입 계획(시기 미정)**

- 전국적 단위의 상징적인 의료·복지·요양형 종합병원 도입
  - 대학병원: 2개소(약 330천㎡/10만평)
- 대형 복합의료단지(178,505㎡) 조성(5생활권 의료·복지기능 지역)
  - 고령자의료시설: 1개소(약 160천㎡/5만평)
  - 실버복합단지: 2개소(약 160천㎡/5만평)
  - 의료산업단지: 1개소(약 660천㎡/20만평)



세종시 의료시설(종합병원) 배치계획



**생활환경편의성 확보**

- ➔ 교육·과학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고 과학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 쇼핑, 의료서비스, 커뮤니티 활동 및 여가 등이 도시 내에서 충족 가능하도록 편리한 자족적 생활 환경 조성
- ⊙ 과학자들을 위한 골프장 등 여가시설 우선할당제, 장묘 공원 내 ‘과학자 명예의 전당’ 마련, 사증 발급 간소화 등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 영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및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 언어생활에 있어 불편함 해소
- ➔ 다양한 외국인 체류형태를 수용하도록 소형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전원주택 등 조성
- ➔ 외국인 학교 설립 등 우수교육환경 제공 및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
- ➔ 외국인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Hotline 운영
  - 외국인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교통망 확충**

- ➔ 대전-세종시 간 연계 교통망 조기 구축
  - 대전 유성-세종시 연결도로 확장 (8.8km, 1,515억원) : '12→'11년
  -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 (9.8km, 2,598억원) : '13→'12년
-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연계 교통망 구축
- ➔ 광역급행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BRT)구축사업
- ➔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광역 철도망 구축
- ➔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구축





**청주공항활성화**

▶ 국제선은 총 6개 노선(오사카, 홍콩, 연길, 푸켓, 방콕, 상해 등)을 운영하지만, 부정기 노선으로 3월 27일까지 오사카와 연길만 운영 중

◎ 국내선 : 1개 노선 / 국제선 : 2개 노선(오사카, 연길)

구분	총 이용객		국내선		국제선	
	이용객	증감율	이용객	증감율	이용객	증감율
2005년	857,269	4.38%	756,220	1.63%	101,049	30.96%
2006년	999,563	16.60%	865,815	14.49%	133,748	32.36%
2007년	1,032,484	3.29%	871,551	0.66%	160,933	20.33%
2008년	1,042,512	0.97%	916,738	5.18%	125,774	-21.85%
2009년	1,023,532	-1.82%	991,331	8.14%	32,201	-74.40%
2010년	1,296,842	26.70%	1,165,716	17.59%	131,126	307.21%

**인천국제공항** 국토의 서북단으로 수도권 제외한 접근성 취약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증설을 통한 국제적 접근성 개선

## 토 론 문

김 선 근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벨트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 벨트사업은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이외 구체적인 추진내용들이 미확정되어 있어 벨트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함. 외국 전문가를 참여시킨 기획팀의 구성이 필요함.
- 대덕 R&D 특구 지정 당시의 경험을 되살려야 할 것임.

### □ 벨트사업에 있어 대전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 벨트사업의 추진은 중앙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거점도시인 대전시가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부지 매입비용 문제는 개발사업자가 결정된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 대전시가 세계적 과학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맞아

- 벨트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전은 우리나라 과학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음.
- 대전시는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예산 중 과학연구 예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며, 행정조직도 과학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대전시 주도에 의한 과학벨트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국내외 전문가 참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 토 론 문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 본부장

### □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개

- 지난 5월 16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선정한 이후,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6월에 설립사무국을 설치하여, 연구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상세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페르미랩, CERN 등의 세계적 가속기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상세설계 및 구축을 위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고, 연말에 상세설계를 위한 사업단장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그리고 과학벨트사업의 핵심내용인 거점지구 개발·조성, 기초연구환경구축, 비즈니스 환경구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에 과학벨트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계획임.

### □ 과학벨트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문에 얼마나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여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교과부와 KISTEP은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연구단장, 핵심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세계수준의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도 연구단장에게 연구의 전권을 부여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오늘 발표에서 명품도시 추진이 언급되었지만,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만큼 연구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 내에 교육·의료·생활 등 모든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인근 세종시나 대전시 유성구 등 이미 어느 정도 국제적인 정주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계획 중인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이를 위해 특히 관련 지자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오늘 발표해 주신 과학벨트성공을 위한 지자체 5개 대응과제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과제 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 조성

- 과제1에서 제시한 대형 연구장비 공동이용체계 구축, 사이버랩 구축 등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이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로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음

#### 과제 2. 미래신성장 선도 창조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과제2에서 제시한 기초-응용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반 확대, 기업지원, 연관산업 육성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거점지구 조성과 동시에 단기간내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외국의 실리콘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연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단기간내에 기초과학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더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조성이나 제도 마련 등은 추진할 계획임.

#### 과제 3. 광역형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

- 현재 STEPI 등과 기능지구 육성 및 거점지구 연계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가 대구, 광주 등에 설립됨으로 광역형 연계는 중요한 사항임.
- 다만 주지할 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는 기초과학으로서 단기간내에 응용을 염두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따라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단기간내에 사업화하기 위해 기능지구나 광역권과 공동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
-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연구자원과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 관련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오창에는 생명연의 영장류센터와 기초지원연의 NMR, MRI 등의 첨단장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장비센터와 연계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현재 교과부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 과학벨트협의회를 구성하여 어제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별로 지자체 자체의 협의회 등도 구성운영 중에 있음. 앞으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과제5. 인프라 확충

- 교통망확충은 과학벨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 단기적으로 대전-거점지구-세종시를 잇는 연결도로 확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고,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도 필요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 벨트, 그게 도대체 뭐냐?

이 광 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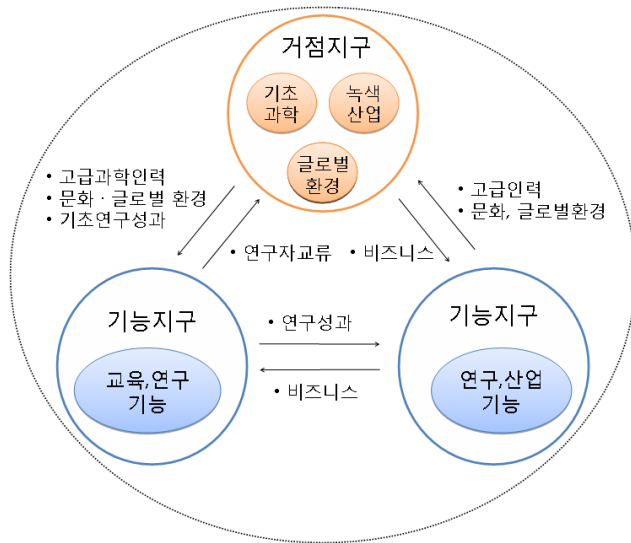
###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정부

정부가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래 35년 만에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이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서 확정되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작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이후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이 표류하는 듯하더니, 불과 석 달 남짓한 논의를 거쳐 2015년까지 총 3조5천4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1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과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불과 17일만의 일이다.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1월 23일에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2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공고일과 마감일, 설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겨우 3일에 불과한데, 다른 법령의 입법예고기간과 견주어 보면 턱없이 짧다. 2월 초순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13일이면 국회로 이송한다고 하니, 아무리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고도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이것이 과학기술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추진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단기적인 업적 부풀리기에 급급하여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낯선 이름



(거점지구) 기초과학, 녹색지식산업, 교육, 글로벌 정주환경 등을 확충하여 기초과학 거점으로 육성

(기능지구)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 응용개발, 생산기지, 물류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제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벨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과연 무엇일까?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등의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보·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자 조성하는 것이라면 ‘클러스터(cluster)’라는 개념이 이미 있는데, 아마도 ‘클러스터’를 더 선정적으로 확장하고픈 욕구가 반영된 것이 ‘벨트’가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구역으로 ‘세계적인 기초연구시설과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과학기능·비즈니스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산업화 등 일련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결국 과학과 비즈니스(사업)를 융합하기 위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신도시)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벨트’는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거점지

구에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의 이른바 Site-Lab을 통해서 전국 각지와 연결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5년부터 50개 연구단(Site-Lab)을 둘 계획으로, 그 중에서 25개 연구단은 교육·연구·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에 설치하여 국내의 다른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Site-Lab 운영에 투입되는 연간 6,500억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를 놓고 벌였던 다툼보다 더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계속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 기초과학 육성부터 제대로 하라

### ‘과학’은 실종되고 ‘사업(비)’ 쟁탈전만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법안은 2월 13일 이전에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마치 아무런 저항도 없는 듯, 아니 있더라도 무시하겠다는 속전속결의 의지를 갖고 정부는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 어안이 병병한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벨트)를 공론화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았고 ‘벨트’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2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형식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반발은 작지 않았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 회의를 앞두고 작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벨트라는 이질적 계획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업화와 관계없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므로 녹색기술개발 연구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기술지주회사도 설립할 필요없다’, ‘과학사업화는 개념상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빼는 것이 좋

다’ 등의 지적은 한 마디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들과 서로 통한다. ‘사업화(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무슨 ‘기초과학’이냐고 하는!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과학’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한 적이 그다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나 예산 배정을 둘러싼 정치 현안으로만 접근할 뿐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별다른 공방없이 수십 건의 법안 중의 하나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벨트’에 2015년까지 투입되는 3조 54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충청권으로 명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내세운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라는 열매만 갖고 쟁탈전이 벌어질 판이다.

### 기초과학은 속전속결로 되지 않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심의, 확정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1/13)에서 통과된 안건 중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인데,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5년간의 계획(’06-’10)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이번에 전면 수정(’08-’12)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 의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만 달랑 1쪽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이온가속기 설치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는 달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에는 “초대형연구시설은 독자 건설보다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틈새 또는 전략부문 대형연구시설 건설을 검토”한다는 단서는 붙어있다. 얼마나 졸속적으로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과학부터 지머리(차분하고 꾸준하게) 챙겨라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노벨상 수상’과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고 풍선을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과 1달 전에 정부의 보도자료를 베끼다시피 하면서 ‘벨트’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들은 특별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그저 짤막한 반응들만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무관심과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냉소 속에 ‘벨트’를 단기간에 맘대로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벨트’가 정녕 과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계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 글은 2009년에 쓰여진 글로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 론 문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자리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다보면 상호간 이견의 폭도 상당부분 좁혀질 것으로 본다. 다만, 충청권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곳의 이야기가 메아리로 되돌아와 본인만 듣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관은 기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이야기도 듣고, 언론 좌담회도 만들어 생각을 공유해야한다.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단지서 일하다보니,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과 권선택 의원님에 대한 이름을 자주 접한다.. 연구단지도 이제 힘든일이 있으면 이들 의원을 찾을만큼 다들 애착이 생겼다.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도 든다. 과학기술계도 이분들에 늘 고맙게 생각한다.

요즘 TV 개그 프로그램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다. 과학벨트 추진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진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것 같다. 과학벨트 추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말이 안되는, 상식이 안통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얼마전 이런 말을 들었다. 대전이 정부가 목매고 있는 광역사업중 광역연계사업에서 올해 단 한건의 과제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거의 나눠주기식인데, 대전은 단 한건도 없다. 들어보니 과학벨트 때문이라고 했다. 이로인해 대전에 예산이 몰리고, 이를 형평성맞게 나누다보니, 대전이 올해 광역연계사업에서 소외됐다는 논리였다. 참, 말이 안되는 논리다. 물론 정부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받치는 식의 일처리는 곤란하다. 수도권 사업만 국가 사업이라

는 논리밖에 안된다. 대전시가 연구단지에 얼마나 공을 들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지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학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모두 기획재정부와 관련이 있다. 얼마전 입수한 국과위나 출연연 및 과학벨트 문제점 지적 등의 내용을 봐도 모두 기획재정부가 키를 갖고 있었다. 최근 화두가 된 출연연의 장소형 연구소 개편도 핵심은 예산이다. 블록편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엄밀하게 보면 실패했다. 국과위가 블록편딩 이야기를 터뜨리며 재정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재정부입장에선 우린 모르는 일로 치부될 정도였다고 들었다. 결국 필요한 예산은 1조 6000억원이지만 21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과학벨트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사실 하나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이슈화된 부지 매입비 지자체 부담 주장도 결국 예산문제다. 예산을 내는쪽이 주도권을 쥐기 마련이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전시가 연구단지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관점이 아니라,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놓고 볼때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덕특구를 놓고 개념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대덕특구가 RIS냐 NIS냐 GIS냐는 것이다. 지역특구인지 국가특구인지, 아니면 글로벌로 가야할 조직인지 답이 뭐냐는 것이다.

이걸 두부자르듯 명확히 자를수 없는걸 알지만, 적어도 기본 방향은 정해놔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부지문제도 접근해봐야할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결정되었는지 다들 알것이다. 결국 2곳이 되었다. 뇌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와 바터였다는 설이 파다했다. 결국 대구로 갔다. 과학벨트도 마찬가지다. 크게 불만은 없지만 3곳에 분산배치됐다.

대전은 2~3년전만해도 어떤 정부 프로젝트도 거의 된적이 없다. 다 떨어졌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것은 좀 그렇지만 이 지역은 주재기자 동향보고를 들여다보면, 참 자기네들끼리 잘 뭉친다. 부러울 정도다. 일단 불리하면 뭉쳐서 여론작업도 하고 싸움을 걸고 본다고 했다. 물론 싸움이 능사는 아니지만, 얻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바로 정보와 열정, 그리고 사람(인맥)이다. 그걸 적극 활용한다고 했다.

대전도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과제

: 과학벨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정여운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 1. 들어가는 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건설 및 지속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의 대변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먹여 살릴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벨트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두고서도 그러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우리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동력으로써 국가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야 할 국가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셨던 사안입니다.

이후 태동부터 결정됐었던 이 입지 선정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애초의 계획대로 대전 대덕이 거점지구로 입지가 발표되면서 세종시와 천안시, 오송·오창 등 3개 기능지구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지금 이 과학벨트 사업이 마치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 혹은 ‘지역개발사업’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이러한 개요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탄생 배경과 그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같은 공감대의 토대 위에 과학벨트의 성공적 건설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동

과학벨트 입지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당선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태의 정책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학벨트는 2017년까지 총 5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13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136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거대 국책 사업입니다.

올해 5월 16일 과학벨트위원회가 대전 대덕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 충북 청원과 충남 연기, 천안을 기능지구로 발표하기까지 수년간 충청권을 술렁이게 했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이 2005년 결성한 랑콩트르(Rencontre) 모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세계일보, 2011-5-16).

이 자리에서 민 이사장은 세계 일류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충청일보, 2011-5-16). 이후 이 제안은 2006년 4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은하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동년 9월 랑콩트르 모임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은하도시 포럼’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이명박 시장은 국민들의 표를 얻을만한 획기적인 정책의제를 찾고 있었고, 이런 중에 과학기술 정책의제로 은하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기초과학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

리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과학자들에게 많은 호응도 얻어냈습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는 은하도시 범위에 산업과 교육 등을 추가해 과학벨트(sience belt)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5대 선거공약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 바이오벨리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벨리인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한겨레신문, 2007-11-2).

이러한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은 충청권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당선 이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충청권 유권자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각했으므로 충청권 민심을 움직일만한 획기적인 선거공약이 필요했고 이것은 과학벨트 계획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단지 과학벨트의 개념만 공약으로 제시되었다면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충청남북도 지역을 일일이 거명하였던 것을 보면 당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과학벨트 공약은 득표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러 선거공약이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선 이명박 후보의 충청권 득표율은 37.1%로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22.6%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 갈등의 잉태

2008년 12월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과학벨트 TF팀을 설치하고, 최초 제안자 민동필 서울대 교수를 팀장으로 임명해 구체적인 정책의제 논의를 지시하면서 과학벨트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살리면서 공약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TF팀이 2개월간 활동하며 제출한 보고서는 당시의 이슈가 곧

바로 다가올 18대 총선으로 쏠려 더 이상 구체화되지 못했고 2008년 3월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김도연 장관이 “과학벨트 사업은 올해는 의견수렴만 할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충북일보, 2008-6-10).

이후 TF팀은 해체되고 교과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과학벨트 추진팀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없다”(충청투데이, 2008-4-24 )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충청권 갈등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론자이자 행정수도 위헌에 앞장섰던 서울대 최상철 교수를 임명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5월 7일 정부 관계자는 “과학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부터 공모사업으로 검토했다”(충청투데이, 2008-5-8)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과 청권, 수도권 정치인과 충청권 정치인 간의 정책갈등에 이어 전국적인 이해갈등으로 확장되는 시발점이 되어,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지역까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과학벨트의 태동부터 거대국책사업 정책의제인 대덕연구단지 과학벨트 건설 이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나타났고 2009년 1월 교과부와 지경부, 국토해양부등이 참여하는 과학벨트 추진단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충청권 입지는 빠져있고 기초과학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대전제만 포함돼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수정할 것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과학벨트를 입지시키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법 공약사항이 법에 명기되지 않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과학벨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고(대전일보, 2011-1-17),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주요공약으로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약속하면서 과학벨트 조성에 공동대응 할 것을 약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하느느 등 지



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과학벨트 입지결정을 공모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 대구경북울산은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공조 MOU를 맺는등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고, 광주전남도 새만금사업과 과학벨트를 연결하기 위해 유치전에 뛰어들 것을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3월 3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건설계획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했고, 굵직한 대선공약을 모두 백지화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과학벨트 백지화는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모두는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주장하였고, 포항시, 기장군, 창원시 등에서 유치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분산배치 가능성 발언이 나온 상태이므로 유치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 4. 맺음말

이러한 논란 끝에 과학벨트위원회는 2011년 5월 16일 공모사업이 아닌 정부지정 국책사업인 대전 대덕지구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충북 청원과 충남 연기, 천안을 기능지구로 발표하였습니다.

과학벨트의 태동부터 공약으로 발표되기까지 국가 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세대 핵심성장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대전 대덕지구에 건설키로 했던 거대국책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이 이토록 수많은 논란과 정치공세를 벌인 소모전 끝해야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과학벨트 입지 확정 이후, 건설을 위해 추진해야할 사업을 위해 투입해야 될 예산이 문제가 되어 과학벨트 사업의 첫 예산인 2012년도 예산 4100억원이 절반으로 잘린 2100억 원으로 잘려나가고, 국책 지정사업인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를 두고도 지자체 부담운운의 몰이해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

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 의제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이거나 혹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 경쟁전을 벌인 끝에 대전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과정의 소모로 인해 있을 수 있었으나,

이제 대전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건설될 과학벨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초석에 과학벨트의 태동과 건설 취지 등에 대한 전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성공적인 건설을 바라는 한 마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아래 명실 공히 미래세대 핵심 성장동력이 될 과학벨트의 지속적 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야 할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